

산업연, ‘초광역 성장엔진’ 제안 “‘5극 3특 기능분담’ 전략 필요”

‘5극 3특’ 성과창출 방향 제시
앵커기업 투자·인재양성 등 강조
“예산 나눠먹기식 지원 벗어나야”

정부가 추진 중인 ‘5극 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권) 균형성장전략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려면 시·도별로 사업을 나열하거나 예산을 나눠 먹는 식의 분산 지원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앵커기업의 투자와 거점도시의 혁신기능을 유기적으로 묶는 ‘초광역 성장엔진’을 설계해야 수도권 일극체제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연구원(KIET)이 10일 발표한 ‘5극3특 체제의 지역산업전략에 대한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그간의 지역산업 정책은 시도별로 3~5개 산업을 선정하고 클러스터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됐으나 실질적인 성장거점을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진단됐다.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비수도권의 주력 제조업이 글로벌 공급과잉과 중국과의 경쟁 심화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핵심 혁신자원인 기업체 연구

개발비의 81.4%가 수도권에 쏠려 있어 지역의 산업혁신과 인재 정착을 뒷받침할 기반이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다.

보고서의 저자인 김송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5극3특 전략이 시도별 사업 나열에 머무르지 않으려면 앵커기업 투자와 배후산업공간, 거점도시의 혁신기능, 대학·연구기관, 인재양성, 규제·금융·재정 지원을 결합한 초광역 성장엔진으로 구체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5극3특 성장엔진을 단순히 유망산업의 이름을 나열하는 정책이 아니라, 산업구조 전환의 ‘접착 장치’로 이해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를 위해 공장 등 생산기능은 배후산업공간에 배치하더라도 연구소, 본사, 기획, 창업, 고급 인력 정주 기능은 권역 중심도시와 연계하는 ‘기능분담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초광역권 내 60분 교통체계와 대중교통망 조성을 통해 노동시장 효율성을 함께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방정부의 역할 변화도 주문했다. 시도별 사업 목록 대신 앵커기업의 신·증설 또는 이전 투자, 핵심 공급망 기업 유치를 결합한 대형 초광역 프로젝트를 구체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거점국립대,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각종 특구 및 금융·세제 혜택을 하나의 정책 패키지로 묶어 기업에 제공하되, 기업 역시 단순 입지를 넘어 지역 연구소 설치나 지역인재 채용 등 지역혁신생태계에 기여하도록 연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정책의 성공을 가르는 성과관리 기준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의 총사업비 규모나 투자협약액, 유치 건수 중심의 정량적 평가에서 벗어나 부가가치 창출, 고임금 일자리 확대, 연구소·본사 기능 이전, 지역인재 정착 등 실제 ‘산업구조 전환 효과’를 중심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대안이다.

김송년 연구위원은 “5극3특 전략이 실질적 균형성장전략이 되기 위해서는 시도별 배분을 넘어 권역별 전략협의체와 초광역 협약을 통해 투자입지, R&D, 인재, 교통·정주 인프라를 함께 조정해야 한다”며 “성과관리도 사업비나 유치건수가 아니라 부가가치, 고임금 일자리, 연구기능 이전, 지역기업 거래, 인재정착 등 산업구조 전환 효과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지난 4~7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2026 CIS(독립국가연합) K-푸드 박람회’ 현장

aT, 러시아서 2100만달러 규모 수출상담

‘CIS K-푸드 박람회’ 참여

K-푸드의 인기가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등지에서 날로 확산하는 가운데, 국내 식품업체들이 지난 주말 현지에서 2100만 달러 상당의 수출상담과 220만 달러 규모의 업무협약(MOU) 체결 실적을 냈다.

10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4~7일 기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2026 CIS(독립국가연합) K-푸드 박람회’가 열렸다.

aT는 국내 수출업체와 현지 바이어가 참여하는 B2B 수출상담회와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B2C 홍보행사 등 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했다.

모스크바 월드트레이드센터에서 열린 수출상담회에는 러시아, 키르기스스탄, 우크라이나, 몽골 등에서 초청된 바이어 45개사와 국내 수출업체 37개사가 참가

했다. 현장에서 총 411건·2110만 달러 규모의 상담이 이뤄졌다. 특히 딸기, 사인머스켓, 사과 등 신선 농산물과 잡채·비빔밥 밀키트 등 가정간편식(HMR)이 관심을 모았다. 국내 업체들은 이를 바탕으로 총 18건·223만 달러 규모의 업무협약(MOU)과 현장계약 등을 맺었다.

이어 주말 모스크바 최대 외식전문쇼핑몰인 ‘DEPO 푸드몰’에서 열린 소비자 행사에는 약 1만5000명이 찾았다. 행사장에는 K-라면존, K-김밥존, K-음료존 등이 마련됐으며, 소비자들이 직접 ‘한강 라면’을 조리해보는 체험 행사와 국산 쌀로 만든 냉동김밥·쌀가공식품 홍보가 진행됐다.

aT 관계자는 “러시아 시장에서 K-푸드에 대한 인지도와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바이어 발굴과 소비자 마케팅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한전, 봄철 산불조심기간 정전 피해 ‘0건’

사전 예방 철저·비상대응체계 운영

한국전력이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철저한 사전 예방 활동과 24시간 촘촘한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한 결과, 산불로 인한 정전 피해를 완벽히 막아냈다.

10일 한전에 따르면,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선제적 예방 활동과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산불에 의한 정전 피해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해 산불로 인해 2개 변전소에서 정전이 발생했던 것과 비교해, 한전의 철저한 사전 대비와 전사적 역량이 결집해 만들어낸 값진 결실로 평가된다.

한전은 이번 산불조심기간 동안 공휴일과 야간을 가리지 않고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했다. 이 기간 현장에 투입된 인력은 한전 임직원 6050명, 협력사인력 6098명 등 연인원 총 12만148명에 달한다. 이들은 전국 산불 발생 지역 인근의 전력설비 443개소에 즉시 출동해 설비 영향 여부를 점검하고, 소방당국에 전력설

비 위치를 안내하는 등 유기적인 현장 대응을 펼쳤다.

아울러 한전은 365개 송배전 협력업체와 비상복구지원 동원체계를 구축해 전선, 전주 등 주요 자재를 사전에 확보하는 한편, 실제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전개해 신속한 복구 태세를 마쳤다. 특히 산지에 위치한 변전소의 산불 발생 위험을 낮추고 유지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산지형 변전소 조경의무 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내는 제도적 성과도 거뒀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봄철 산불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 등 계절성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라며 “산사태 취약 철탑과 변전소 배수 시설, 지중설비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폭염에 따른 설비 과열 및 화재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해수부, 서해북부 야간조업 전면 허용

연간 3200t 수산물 추가어획 추산
황종우 장관 “조업여건 지속 개선”

당국의 규제완화에 따라 서해북부 야간조업이 44년 만에 재개된다. 이 일대 해역은 도합 3039㎢(9억1900만 평)로, 서울 면적(605㎢·1억8300만 평)의 5배에 달하는 어장이 추가로 확보되는 셈이다.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인천·경기 연안해역(북위 37도30분 아래)에서의 야간 조업을 전면 허용한다고 10일 밝혔다. 또 인천 강화해역(북위 37도30분 위)에서는 연장된 조업시간의 시범운업을 개시한다.

이를 통해 1200여 척의 어선이 연간 약 3200백 톤(t)의 수산물을 추가로 어획할 수 있다는 추산이 나왔다. 연간 약 187억 원 상당의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하고 있다.

인천·경기 연안 및 강화해역은 접경해역의 안보 문제로 지난 1982년부터 야간 조업이 금지돼 왔다. 일출부터 일몰까지만 조업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어업인들은 조업시간 제한에 따른 조업의 어려움 및 수익 감소를 겪었다.

이에 해수부는 국방부,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하에 지난 3월 인천·경기 연안해역에서 시범적으로 야간 조업을 허용하면서 어선사고 발생 등의 문제점이 없는지 살폈다.

이번에 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제한 공고가 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어선은 37도 30분 이상 인천·경기 연안해역에서 야간 조업과 항행이 전면적으로 가능해졌다. 해수부는 야간 조업금지 해제에 따른 월선 및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해당 지방정부의 지도선 야간 교대 배치 등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 그간 야간조업 시범운영에서 제외됐던 37도30분 이상 강화해역의 경우 올해 말까지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 연장된 조업시간을 시범 운영한다. 특히 강화해역 남단 7개 어장의 경우 봄철 및 가을철 성어기에는 일출 전 1시간부터 일몰 후 1시간까지 조업시간을 추가 연장하여 조업할 수 있게 된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이번 규제 개선으로 고구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수익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접경수역에서의 조업 여건을 지속 개선하고 어업인의 안전관리도 빈틈없이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무보, 韓 기업 해외법인 유동성 지원 확대

장영진 사장, 중견기업 소통 강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로 우리 기업 해외 현지 법인의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해외 현지법인 운전자금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리며 유동성 지원에 본격 나섰다.

무보는 장영진 사장이 지난 9일 충북 음성 소재 중견기업 삼동을 방문해 해외 현지법인 운영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리 코일 등 전력 소재 전문 제조기업인 삼동은 테네시 등 미국 내 주요 거점에 생산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미국 내 전력 인프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삼동은 무보의 해외사업금융보험 지원을 받아 미국 현지에서 2000만 달러 규모의 운전자금을 조달한 바 있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국제 정세 불안으로 원자재 확보 등을 위한 해외 현지법인의 운전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금융지원이 부족해 해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이 지난 9일 충북 음성에 소재한 삼동을 방문해 해외 현지법인 운영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무보

외사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권익위, 공적보험 사각지대 해소 나서

공공기관이 행정 착오로 산재환자에게 치료비를 잘못 지급해 놓고, 뒤늦게 이를 알아차려 환수 조치에 나선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10일 산업재해 요양이 종결된 자에게 산재 요양비를 착오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 환수 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요양비 지급 시스템을 정비하는 제도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의 급여 체계가 복잡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

려운 만큼, 산재 요양 종결이 임박한 환자에게 사전에 건강보험 전환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관련 지급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라는 취지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등 공적 보험 체계 간의 전환과정에서 행정적 안내 부족이나 시스템 미비로 국민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함께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